14세 미성년자 범죄도 더 이상 '사각지대' 아니다

최근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을 채택한 가운데 새로 개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이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년 만에 개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은 어떤 문제들을 주목했을가?

반려동물이 상해를 가할 경우 직접 치안처벌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시의 주택단지에서 맹견을 사육하면서 목줄을 매지 않고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이 물리는 사건이 수차 발생했다. 앞서 민법전에 근거해 민사 침권 책임을 추궁하면 침권자는 피해자의 의료비 등 손실만 부담했는바 위법의 대가가 비교적 작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관련 법률법규를 어기고 맹견 등 위험 동물을 판매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먼저 경고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거나 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5일 이하 구류처벌을 가하거나 1,000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형에 처한다. 이 규정은 근원 관리 차원에서 위험 동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사회에 류입하는 위험 동물 수량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중들은 위험 동물의 위협을 받을 경우 강력한 법률무기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였고 공공공간의 안전성도 뚜렷하게 제고될 전망이다.

구타당한 후 감히 반격하지 못한다? 새 법규 정당 범위 처벌 면제 밝혀

수년래 '과잉'방위 사건이 자주 분쟁을 일으켰다. 이는 명확한 법률법규가 결핍한 원인으로 공민들이 자위권을 행사할 때 법률 위험부담에 직면해야 하고 심지어 사회의 정의감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있음을 설명한다. 새로 개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은 불법침해를 당할 경우, 공민은 방위성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해당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정당방위의 합법성을 명확히 했다. 새 법규는 공민이 불법침해에 직면할 경우, 필요한 방위 조치를 취해 자신이나 타인의 인신, 재산 안전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방위 한도를 확정했다. 방위행위는 합리한 한도내에서 취해야 하며 과잉방위로 불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법률 책임을 면제했다. 정당방위 조건에 부합되는 행위에 대하여 치안관리처벌 책임을 면제시킨다. 이로써 공민이 방위권을 행사하는 합법성을 보장한다.

의인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타인이 불법침해를 당할 때 공민이 선뜻 나서는 것을 고무한다. 새 규정은 의인행위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확히 했는바 방위행위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면했다.

립증책임을 명확히 했다. 방위성 조치와 관계되는 분쟁에서 공안기관은 충분히 증거를 조사하여 방위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정을 확보한다. 이 같은 규정들은 공민이 필요한 방위를 진행하는 데 대한 권리를 명확히 했고 방위의 합리한 한도를 확정했으며 타인의 침해를 막아주는 의인행위를 보호했다.

미성년자 불법범죄 징벌은? 14세—18세 불법자 구류 가능

새로 개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은 미성년자 보호, 교정 안전 등 민생 화제에 주목했다. 최고인민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근 3년간 미성년자 불법범죄 규모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전국 검찰기관이 처리한 미성년 범죄용의자는 10만 1,526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다. 새로 개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은 미성년자 문제에서 일련의 중요한 규정을 내렸다. 우선 미성년자 행정구류 집행 조건을 조정했다.

14세—16세, 1년내 두번 이상 치안관리를 어긴 미성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구류 집행할 수 있다.

14세—16세, 16세—18세 미성년이 처음으로 치안관리 위반 시 상황이 엄중하고 영향이 악렬하다면 역시 법에 따라 구류를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이들 미성년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정구류 처벌을 집행하지 않던 상황을 개변시켰다. 이 밖에 신규 치안관리처벌법은 치안처벌 년령이 되지 않았거나 구류를 집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미성년자범죄예방법 규정에 따라 교정 교양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CCTV 넷

정식 출범! 최고인민검찰원 새 기구 설립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중앙기구편제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집행검찰청에 '검찰수사청'(检察侦查厅) 간판을 추가로 달았다. 이로써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수사청이 정식 설립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수사청은 주로 직권을 람용하여 시행한 불법구금,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 불법 수사 등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사법사업 일군의 범죄행위에 수사 권한을 행사한다. 원칙적으로는 공안기관의 관할을 받지만 상황에 따라 국가기관 사업일군이 직권을 리용해 저지른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최고인민검찰원이 직접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할 수도 있다. 동시에 이 부문은 관련 수사사업을 전개하도록 각급 지방 검찰원을 지도한다.

검찰수사청이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사법 공정을 수호할 데 대한 당중앙의 깊은 중시와 사법부패를 엄벌할 데 대한 선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당과 국가 법치 건설의 전반 국면에 봉사하는 직무 수행 담당에 최고인민검찰원이 자각적으로 복종함을 구현했으며 검찰 수사의 전문화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음을 표징한다. 또한 이 기구의 설립은 검찰 수사 체계 통합과 부패척결을 통해 사법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28개 성급 검찰원과 일부 지구급시 검찰원들에 전문적인 검찰수사기구를 설립했다.

/인민일보

길림성공안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사업 상시화 추진 포치

일전, 길림성공안청은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 지도소조회의 및 전 성 공안기관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 상시화 추진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2024년이래의 사업 상황을 총화하고 당면 형세 임무를 깊이있게 분석했으며 폭력배 악세력 제거 사업의 상시화 추진에 대해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올해는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을 상시화한 지 5년째 되는 해이다. 전 성 공안기관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과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깊이있게 관철, 락착하여 폭력배를 반드시 소탕하고 악세력을 반드시 제거하며 보호세력을 반드시 짓부시고 부패를 반드시 타격하며 소란을 반드시 다스리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책임담당과 사명담당을 한층 더 강화하고 더욱 높은 기준, 더욱 실제적인 기풍, 더욱 엄격한 요구로 폭력배 악세력 제거의 상시화를 틀어쥐여 새시대 길림의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는 데 량호한 사회치안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길림성공안청은 전 성 공안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엄격한 단속 방침을 견지하고 '무관용'을 유지하며 '신속하고 정확하며 강력함'을 내세워 문화관광, 인삼의약, 자연자원, 정보네트워크 분야의 폭력범죄와 경영환경 파괴, 향촌 진흥 관련 폭력범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 인터넷 '대출사기' 등 인터넷 관련 신형 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연구를 강화하고 단속 강도를 높이며 인터넷 관련 신종 폭력범죄의 조직자, 경영자, 리익추구자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수사처리를 강화하고 수사중인 폭력범죄사건에 대해 끝까지 틀어쥐고 강력하게 추진하며 되도록 빨리 전과를 올리도록 힘써야 한다. 결연히 '그물'을 늘여 '보호세력'을 짓부시고 '농촌 패권세력', '향촌 패권세력' 등 악세력에 대한 단속을 총괄실시하며 배후의 '보호산'을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철저히 소탕하고 제거하며 폭력배 악세력의 배후 리익사슬을 깊이 파헤치고 법에 따라 폭력배 악세력의 관련 자산을 봉인, 차압하며 불법소득을 전면적으로 추징하여 폭력배 악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길림일보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불법 취업 목적 알면서도 비자를 대행해주었다가 형사처벌

최근 일부 사람들은 불법 리익을 얻기 위해 타인이 불법으로 해외 취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대행, 출국 일정 주선, 현지 도착시 픽업, 해외 취업 알선 등의 써비스를 제공하여 불법적인 로동력 송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불법 출국후 취업을 목적으로 출입국 사유를 조작하거나 신원을 은폐하고 심지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려권과 비자를 사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범죄에 해당하는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한국에서 박사과정 재학중인 중국인 류학생으로서 한국의 로펌에서 10여년간 풍부한 실무 교류 및 학술연구를 수행하면서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각종 비자를 리용해 한국에 출국한 외국인들을 다수 접했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 출국을 위해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법체류 상태로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다양한 불리익을 감수하고 있었다.

비정규적인 경로로 해외에서 취업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신분이 불안정하고 권익 보호도 어려우며 착취당할 가능성도 크다. 많은 불법 출국 로동자들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더 큰 곤경에 빠지고 심지어 본국으로 송환되여 책임을 지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사례 1】 관광으로 위장한 불법 취업, 밀입국죄 성립

료녕성 대련시 감정자구인민법원이 선고한 (2019) 료 0211 형초 58호 형사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위모(석사학력)는 한국에서 불법 취업하려는 타인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위해 '관광 일정 포장'을 하여 한국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하고 이 과정에서 8만 5,000원의 보수를 받았다. 감정자구인민법원은 위모의 행위를 타인을 조직해 국경을 불법으로 넘게 한 범죄로 판단하고 형사처벌하였다.

【관련 법령】

〈중화인민공화국형법〉(2023년 개정) 제318조: 타인을 조직해 국경을 불법으로 넘게 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벌금 또는 재산몰수에 처한다.

(1) 조직의 주도자.
(2) 다수 또는 반복적 조직.
(3) 피해자의 중상 또는 사망 초래.
(4) 인신자유 제한.
(5) 폭력·협박으로 검사 회피.
(6) 불법 수익이 막대한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정.

전항 범죄와 함께 살인·상해·강간·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병존할 경우, 수죄 병과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한편,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출입국 증명서나 비자를 편취하여 출국한 자들 또한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사례 2】 신분을 위조해 빈번히 출입국, 결국 밀입국죄로 판결

광동성 광주시 남사구인민법원이 선고한 (2024) 월 0115 형초 109호 형사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온모(소학교 학력)는 상업비자 신청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도움으로 광주 모 회사 직원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향항·오문 상용비자를 신청했다. 이 승인된 비자를 바탕으로 2020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약 1,000회에 걸쳐 국경을 넘으며 오문을 왕래했다. 남사구인민법원은 온모의 행위를 국경밀입국죄로 인정하고 형사처벌했다.

【관련 법령】

〈중화인민공화국형법〉(2023년 개정) 제322조: 국경관리 법규를 위반하고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사안이 중대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구류·감시처분과 벌금에 처한다.

테로 활동 참가 목적 등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국경(변경) 관리 방해 형사사건 처리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국경 불법 출입'으로 본다.

(1) 출입국증 없이 국경 통과 또는 검문 회피.
(2) 위조·변조·무효 출입국증 사용.
(3) 타인의 출입국증 사용.
(4) 허위사유·신분 은폐·신분증 도용 등을 통한 출입국증 획득.
(5) 기타 방식의 불법 출입국.

【결론】

이와 같은 범죄는 조직화되여있으며 주도자·경로 담당자·모집자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여있다. 역할의 차이와 관계없이 이들의 행위는 모두 타인을 조직하여 국경을 불법으로 넘게 하는 것으로 형법상 '밀입국조직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불법 출국후 해외 취업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정식 계약 체결이나 권익 보호가 어려울뿐더러 렬악한 근로환경과 인신피해의 위험도 따른다. 적발될 경우, 본국 송환 및 재출국 제한 조치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출입 편리 위해 문에 끼웠던 벽돌 때문에 이웃에 13만원 배상

최근, 일상 속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법적책임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개요:

피고 팽모와 원고 정모는 같은 아빠트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어느 날 팽모는 출입 편리를 위해 공동현관문에 벽돌을 고정시켜 문이 열려있도록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벽돌이 현관 내부로 밀려들었고 이때 마침 출입하던 정모가 이 벽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모는 그날 병원으로 이송되여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 왼쪽 발목 삼분 골절과 발관절 아탈구로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정모는 팽모의 과실과 함께 부동산관리회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량측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후 부동산관리회사는 정모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여 주동적으로 팽모를 찾아가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정모는 호남성 장사시 악록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배상책임 주체와 책임 비률을 판단하는 것이다.

공동현관문은 주민들의 일상 통로인데 팽모는 출입 편리를 위해 벽돌을 끼워둔 과실로 정모가 다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다. 부동산관리회사의 경우, 정모를 도운 점은 인정되지만 공동현관문의 장애물을 제때에 순찰, 정리하여 잠재적 우환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에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정모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성인으로서 지상 상황에 주의를 돌리지 못한 소홀함이 존재하므로 역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최종 법원은 총 손해액을 19만여원으로 인정하고 여러측의 과실 정도를 종합하여 팽모, 부동산관리회사, 정모가 각기 70%, 10%, 2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팽모는 13만여원의 배상금을 정모에게 지불해야 했다.

법관 조언:

담당법관 장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집앞' 공공구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모든 공민의 법적 의무이다. 민사주체는 공공구역에서 작은 행동이라도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의가 아니였다'는 리유로 책임을 피하면 안된다. 또한 공공구역의 관리책임 부문은 안전보장 의무가 있는바 지속적인 점검으로 동적으로 변화하는 안전우환을 제때에 조사하고 제거해야 한다. 시민들도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민넷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운전한 두 남자, 전부 행정구류

최근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길림지대 순찰 6대대 경찰들은 매하구남(梅河口南) 수금소에서 직무수행중 길 A7G*** 소형 자동차 한대가 운행하다가 서기를 반복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 양모와 조수석의 송모 두 사람 모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한 충격스러운 사실이 확인되였다.

료해에 따르면 양모와 송모는 동네 친구로 그날 함께 놀러 나온 참이였다. 양모는 '조금만 운전하면 문제없겠지.' 하는 요행심리로 시동을 걸었고 송모는 말리기는커녕 "번갈아 운전하면서 즐기자."고 제안했다.

결국 경찰은 법에 따라 송모와 양모에게 각기 벌금 2,000원과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내렸다. 이 처벌 결과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의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요행심리로 법의 제재를 피하려는 모든 행위는 최종적으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광범한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차량 운전은 반드시 해당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야 가능한 바 절대 요행심리를 가져서는 안된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안전 그리고 모든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무면허 운전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모두가 상호 감독하여 무면허 운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교통경찰에 신고하여 공동으로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원활한 도로교통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리전기자